

일본 소비자청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 표시의무 확대 추진

소비자청은 12일, TPP 대책의 일환으로 원료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한 가공식품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보도(일본농업신문, 11.13)

TPP로 외국산 농산물 및 식품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불안감을 느끼는 소비자가 국산농산물을 원료로한 가공식품을 선택하기 쉽게하기 위함임. 단, 부담증가분을 염려하는 식품제조업자로부터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음. 외부 전문가 의견구렴을 통해 실행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추진해 나갈 예정. (외식업은 제외)

수입농산물의 증가로 인해 야채나 과일 등의 신선식품은 모두 원산국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국을 표시하는 의무가 있는 품목은 일부에 지나지 않음. 건조버섯, 떡, 녹차음료, 조미식육 등 22품목 및 농산물 절임 및 야채냉동식품등 개별 품질표시기준이 있는 4품목뿐임.

한편 TPP에 의한 관세철폐, 삭감등으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값싼 외국농산물은 가공식품의 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음. 외국에서 제조된 가공식품의 수입증가도 예상됨. 소비자 및 농가로부터는 표시의무 확대 주장이 높았지만, TPP 합의 이후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 한편 식품제조업계는 소극적으로 가격이나 출하시기에 맞추어 국산과 수입산을 섞어서 쓰기 때문에 포장 및 인쇄등의 부담이 예상됨.

■ 시사점

- TPP 이후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각 부처별 시책이 나오고 있는 와중

에 식품표시법을 총괄하는 소비자청에서도 TPP관련 대책을 내 놓았다는 점에서, 추후 TPP, FTA 관련 국내 대응에 있어서도 비슷한 대책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방향으로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동 가공식품 원료에 대한 표시의무가 성립이 될 경우, 현재까지 국산과 수입산을 섞어 쓰던 식품메이커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므로 시행이후의 식품제조업체들의 대응방안 또한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자료관련 문의 : 도쿄지사 이세호(81-3-5367-6694)